

도시 시민사회의 이해

조명래
단국대 교수

1. 서론

오늘날을 우리는 ‘시민의 시대’라 부른다. 시민의 문제가 이 시대를 사는 삶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시민이란 말 자체는 ‘시(市)에 사는 사람’을 지칭하지만, 그 함의는 개명된 자의식과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적 실천주체에 관한 것이다. 시민의 이같은 뜻을 되새겨 볼 때, 우리 사회는 과연 어느 정도 ‘시민의 사회’가 되어 있을까, 우리는 어느 정도 시민으로서 품격과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된다. 이러한 질문이 스스로없이 제기되는 것은 일상의 주변에 목도되는 우리의 시민(사회)적 삶이 이념형적 시민의 그것과 여전히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인구의 절대다수는 도시에 살고 있다. 최소한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를 분명 ‘시민사회’라 할 수 있다. 인구의 다수가 도시에 살고 있는 사회란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시민사회의 문턱을 넘어섰지만, 시민사회로서의 완성도는 여전히 요원하다. 즉, 시민사회는 열려 있지만 시민적 덕목과 규범이 일상생활 속으로 내화되지 못한 채 개인이익의 실현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만 만연하는 곳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다.

시민사회는 본디 갈등과 긴장이 넘치는 곳이다. 하지만 우리의 시민사회에서 목도되는 갈등은 시민사회의 건강성을 보여주기보다 퇴행성과 후진성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데 딜레마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적 성질, 즉 시민성이 그만큼 불완전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민사회는 어떻게 등장했고, 어떠한 존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일어나는 시민들의 일상사적 갈등은 어떠한 특성을 띠고 있을까? 우리의 시민성은 서구사회의 시민성과 어떻게 다른가? 건강한 시민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2. 시민사회의 발생론적 이해

한국의 시민사회 논의에서 주류는 사회운동에 관한 관심의 연장에서 국가와 대비되는 시민사회의 등장을 민주화나 시민적 자유의 확장으로 설명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설명은 시민사회를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자유의 공간으로 간주하는 계몽주의적 자유주의 시민사회관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사회 전체를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로 나누는 헤겔적 이분법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약점은 시민사회가 국가와 분리된 자유의 영역이 근대사회 전체의 발전 속에서 정치와 경제로부터 떨어져나간 영역, 즉 시민적 일상의 재생산이 자율적으로 전개되는 영역으로 변모해가는 측면과 그렇게 변모한 결과로 전체 사회 속에서 시민사회가 갖는 관계적 위상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 점이다. 시민사회의 출현과 변화, 그와 더불어 변해가는 역동적인 역할구조는 시민사회를 발생론적으로 접근할 때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1) 시민사회의 등장과 발전

서구에서 시민사회는 국가의 지배권력에 맞서 개인의 자연권적 자유

(즉, 인권, 사적 소유권)를 담아내는 담론적·철학적 영역으로 간주하면서 등장하였다.¹⁾ 초기 자유주의자들이 시민사회란 공간을 염두에 두면서 강조했다던 시민권적 자유는 결국 자유상공인 계급의 자유로 실현되었고, 그 후 이들은 획득한 자유를 경제적 부의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계몽주의적 자유는 사적인 경제적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장적 자유로 구현되었고, 시민사회는 이를 제도화하는 공간으로서의 실체성을 갖게 되었다.

시민사회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이는 헤겔이다. 전체 사회를 국가사회와 시민사회로 이분화하면서 사용된 헤겔의 시민사회 개념은 국가와 대비하여 시장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에 관한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 시민사회는 욕망으로 가득 찬 시장잡배들이 들끓는 곳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어떠한 공동선이나 진보를 기대할 수 없었다. 시민사회의 방치는 타락과 무질서를 초래한다고 믿었던 그는 결국 절대정신의 구현인 국가가 이를 순치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였다. 헤겔의 시민사회관은 막 획득한 자유를 이용해 시민들이 경제적 이익을 경쟁적으로 쟁기는 초기 상황에 관한 것으로 그후 발전된 시민사회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헤겔 이후 시민사회는 그간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자유상공인이 본격적인 자본가로 역할을 전환하는 가운데 국가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는 경제활동이 사회화되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시민들이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공간이 되면서 시민사회 내에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부르주아의 이해가 궁극적으로 관철되는 질서가 자리잡아갔다. 그래서 맑스에게 있어서 시민사회는 부르주아 사회였다.

맑스의 시민사회관은 계몽주의 이래 확장되어온 자유로운 사적 경제활동이 국가의 방임적(최소국가) 역할을 매개로 나름대로 자율적인 질서와

1) 계몽주의시대 로크 등의 자유주의자들이 설명했던 시민사회는 국가에 대비되는 자연권적 자유가 보장되는 철학적·명목적 사회영역으로서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존재하는 실체적 공간은 아니었다. 시민사회의 실체성은 그후 헤겔에 의해 최초로 포착되었다가 맑스, 그람시, 하버마스 등에 의해 다양하게 밝혀졌다.

제도로 자리잡아가는 단계에서 나타난 시민사회의 모습을 포착한 것이다. 시민사회는 생산과 소비, 노동과 여가, 경제와 문화가 전체로 혼합된 사적 영역을 이루게 되었지만, 자본주의적 시장경제활동이 더욱 확장되고 분화되는 가운데, 이 영역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시장시스템)으로 분리되어감으로써, 그간 혼재되어 있던 개인의 일상생활 차원만이 결국 남게 되었다. 이러한 진화의 결과로, 시민사회는 한편에서는 국가와 분리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와 분리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으며, 내용적으로는 국가나 시장으로 환원되지 않는 개인의 삶이 사회화되고 재생산되는 일상세계로 채워지게 되었다.

이를 최초로 주목한 사람은 맑스가 죽은 50년 뒤에 태어난 그람시였다. 그에게 있어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 중간에 설정되는 제3의 영역(the third realm)으로 간주하게 되었고, 그 기능은 일상문화의 구조와 방식이 재생산되는 것으로 보았다. 제3의 영역으로서 시민사회는 가족생활, 문화예술활동, 결사체적 활동, 종교활동 등이 고유하게 이루어지는 삶의 문화적 재생산 영역이지만 이는 달리 지배세력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곳이기도 했다. 또한 근대의 주체들이 비판과 저항을 통해 이를 전복시킬 수 있는 변혁의 장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다시 말해 그람시에 이르러 시민사회는 정치, 경제에 이은 문화의 영역이면서 생산에 이은 재생산의 영역이고 동시에 지배에 맞서는 시민주체들의 자의식적 실천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람시의 이러한 입장은 근대사회의 발전 속에서 변모한 시민사회의 위상과 기능을 재규정하는 것이었다. 이 관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하버머스이다. 그에게 있어 시민사회는 행정과 시장으로 구성되는 체제(system)에 맞서는 생활세계이며, 생활세계 내에서도 공적 담론이 실행되는 영역으로 간주함으로써 위상 자체를 체제와 개인을 매개하는 중간에 둔다. 내용적으로 시민사회는 근대의 주체들이 사적 영역을 박차고 나와 국가나 시장이란 체제를 앞에 두고 일상생활의 쟁점을 공론화하면서 한편으로는 국가를 향해,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을 향해 ‘더불어 의사소통하는 것’을 실천하는 장으로 설정된다(이신행, 1998).

서구에서 시민사회는 이러한 경로를 통해 등장·발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진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혁명과 같은 치열한 투쟁과 갈등을 거치는 동안 한편에서는 국가권력을 탈중심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권적 삶의 공간을 확대하는 변화를 수반하면서 전개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자의식적 시민주체의 역할이 늘 있었다.

2) 시민사회의 위상

앞서 살펴본 시민사회 등장의 역사는 전체 사회에서 시민사회가 차지하는 위상 속으로 녹아들어가 있다. 다시 말해 시민사회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전체 사회 속에서 시민사회가 분화되고 발전해온 흔적들의 응축물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시민사회는 국가의 지배행위와 그의 권한, 즉 정치적 힘이 작동하는 영역인 ‘정치사회’(political society)로부터 시민들의 사적인 활동이 권리로 보호받는 영역으로 구축되어 있다. 전통사회에서 사적 활동이 전개되는 영역은 개인들이 일상으로 꾸리는 경제활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었지만,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활동이 제도화되는 영역과 개인적 삶의 권리가 제도화되는 영역으로 양분되었다(Habermas, 1984, 1987). 여기서 시민사회는 후자를 주로 일컫는다. 이렇게 본다면 시민사회는 ‘정치사회’(특히 국가영역)와 ‘경제사회’(특히, 시장영역) 중간에 위치해 있는 상대적 위상을 가지게 된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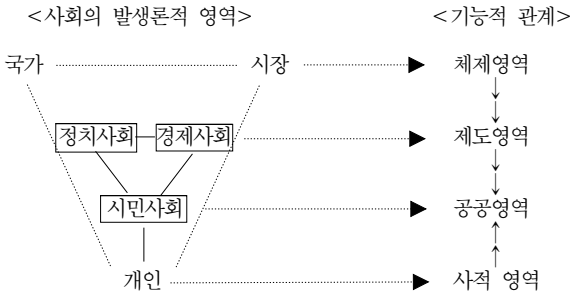
기능적 관계에서 시민사회는 일상적인 개인적 삶의 영역(즉, 사적 영역)과 국가 및 시장으로 구성된 체제·제도적 영역 중간에 존재하는 공공영역²⁾에 해당한다.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민주주의의 제도화 과정에서 필연

2) 하버머스는 ‘공공영역’을 국가와 ‘시민사회’(사적 영역)의 매개항이자 통로로 봄으로써 이 양자를 달리 구분하였으나 이 글에서는 동일한 기능적 영역으로 간주한다. 시민사회란 본래 개인주의적·시장적·사적 관계 중에서도 국가의 제도적 규범으로 규정되는 활동들로 채워진 ‘부분적으로 상부구조화’된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공적 규범, 담론, 공동체적 결사, 기본권적 생활관계 등이 형성되고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적 영역 대신에 ‘공공영역’으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공공영역은 국가제도적 활동과 사적 활동이 부딪히면서 시민권적 규범으로 생산되는 곳이다.

<그림 1> 사회형성 및 기능관계



적으로 형성되는 영역으로서 시민사회는 개인의 활동 중 일부가 ‘공중(公衆)적 관계’로 발전된 부분과 국가제도적 활동(예, 입법활동, 사법활동, 통치활동, 외교활동 등)이 세분화되면서 개인의 활동을 보호하는 부분이 결합되는 곳이다. 이는 다른 아닌 체제/제도적 활동과 사적 활동이 마주치는 중간 매개항이다.

시민사회는 근대의 합리적인 경제거래나 사회계약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간섭받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적인 이해관계로부터도 임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공민적인 권리행사의 관계로 전환되는 활동의 누적에 의해 형성되었는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는 시민혁명과 같은 시민들의 자의식적인 노력과 그 결과의 제도화(예, 기본권의 제정)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사적인 이해와 체제적인 이해가 교차되고, 또한 정치와 경제의 힘이 교차되는 중간영역에 있는 시민사회는 근대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모순과 갈등들로 항상 가득 차 있다. 그 모순과 갈등은 시민적 삶이 일상적으로 전개되는 노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저변에는 ‘근대적 일상’이 놓여 있다. 이 일상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와 제도적 이해가 늘 마주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한 주장과 반주장이 교차하게 된다. 시민사회에서 이것은 곧 ‘시민운동’이란 모습으로 드러나 왔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시민사회의 형성과 시민운

동의 전개가 대부분 도시란 영역을 무대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성원들이 바로 ‘도시의 사람’이라는 의미인 ‘시민’(citizens)인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도시인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장의 전개로서 시민운동은 필연코 도시문제의 해결을 우선으로 하는 운동, 즉 도시운동을 지배적인 양상으로 취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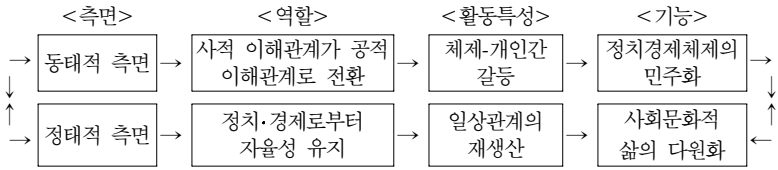
3)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능

정치사회와 경제사회로 구성된 체제적 영역으로부터 독립적인 시민사회는 동태적인 측면과 정태적 측면으로 나누어 그 역할과 기능을 살펴볼 수 있다(<그림 2> 참조).

동태적인 측면에서 시민사회는 일상과정의 전개 속에서 생성되는 사적인 이해관계를 체제적인 규정력(예, 시장의 논리나 국가권력)에 맞서 공적인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규범화하고 관행화(예, 시민권화)하는 과정이 중복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다.³⁾ 이 과정에서는 상이한 입장간에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 갈등에는 사적 이해간의 협상·조정 에 따른 갈등, 사적 이해와 체제적 규정 간의 갈등, 체제에 대한 시민적 요구·감시·비판 에 따른 갈등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이들이 조정되고 제도로 투입 되는 과정에서(이는 대개 시민운동을 매개로 함) 정치경제체제의 민주화가 이룩된다. 이런 점에서 시민사회의 확장과 발전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초’를 다지는 것이 된다.

<그림 2>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능

3) 이런 점에서 정수복(1994)은 시민사회를 “권력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공적 의견과 규범이 만들어지는 사회정치적 공간”이라고 정의한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러한 동태적 과정이 반복적으로 전개되지만, 정태적으로 볼 때 이러한 활동이 일어나는 시민사회는 국가로 표방되는 정치사회, 시장·자본으로 표방되는 경제사회로 환원되거나 통합될 수 없는 자율적인 영역으로 남아 있거나 있어야 한다. 이 자율영역은 다른 아닌 시민들의 일상적 삶의 관계가 권리화되고 공중화(公衆化)된 시민생활의 양식으로 영위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영역의 자율성이 유지되는 것은 앞의 '동태적 과정'에 의해 가능해지지만, 그 결과로 시민사회가 담고 있는 사회문화적 삶의 다원화와 풍부화가 구현된다.

시민사회의 이러한 두 가지 역할과 기능은 서로 맞물려 있으며, 이를 매개해내는 기제가 바로 '시민운동'이다. 시민운동은 사적인 주장이나 이해관계를 체제·제도적 규정에 대응하여 시민권적 권리로 규범화하는 것을 요구하는 시민의 자율적이며, 자의식적인 주장의 표현이다. 이러한 운동은 그 자체로서 시민사회 내의 갈등의 한 표현이면서 동시에 그 갈등을 해결하는 측면⁴⁾을 함께 가지고 있다. 시민운동을 통한 갈등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끊임없이 분화되고 다양화되는 시민의 일상적 삶을 다원적 구조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 점에서 시민적 삶의 권리화·다원화·풍부화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은 시민들의 자의식적인 '밑으로부터의 정치적 실천' 그 자체이다. (탈)근대 사회발전의 초석은 바로 이러한 시민운동에 있다.

시민사회의 형성발전과 시민운동의 활성화 간에는 이렇듯 필연적인 상

4) 시민운동을 통해 경쟁적이고 갈등적인 사적인 이해관계를 시민권적 관계로 규범화·제도화하는 것이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국가권력의 임의적 사용을 시민권 보호 차원에서 제한하는 것 등은 모두 갈등해결적 측면이 된다.

관관계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날 지배적인 양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민운동은 과거의 산업화 초기나 산업화가 성숙된 시대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운동의 쟁점이 일상의 심화된 탈물질적 관계나 가치체계를 둘러싸고 불거져나오는 갈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지구화, 정보화,⁵⁾ 포스트모던 문화의 확산, 생태적 중요성의 인식 확산 등에 의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관계나 그 의미체계가 심대히 변함에 따라 그들을 둘러싼 시민사회적 쟁점들이 폭발하면서 시민운동의 중요성이 전에 없이 커지고 있다.

3. 도시를 통한 사회분화와 시민사회의 출현

1) 도시화와 도시의 정치경제적 형성

지난 30여 년간 지속된 인구이동으로 인해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옮겨간 결과, 현재 인구 100인당 87명 정도가 도시에 살고 있다. 한국은 현재 도시화율이 90% 가까이 육박한 고도의 도시화된 사회로 치닫고 있는 중이다.⁶⁾

급격한 인구이동과 도시화가 함축하고 있는 중요성은 그에 수반된 사

5) 정보화는 시민사회형성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의사소통관계를 급격히 확대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컴퓨터통신으로 한 사람이 한 번에 접촉 가능한 사람의 수는 기술적으로 2억 명에 이른다고 한다. 자동차시대에는 한 사람이 20만 명 앞에서 연설할 수 있었고, 산업화 이전에는 약 2만 정도였다는 사실에 비하면 이는 실로 엄청난 변화이다. 특히 컴퓨터통신을 통한 의사소통은 일방통행식 소통방식을 쌍방향적·상호작용적(interactive)인 소통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동시에 수반하고 있다. 의사소통영역의 급격한 확장과 쌍방향적 소통방식의 확산은 개인간의 의견 및 의사 교환의 형태와 질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와 이를 기초로 하는 사회적 실천인 민주주의의 의미를 바꾸어놓고 있다. 시민사회의 이러한 의사소통구조의 변화가 시민운동의 새로운 하부구조로 기능하고 있다.

6) 서양 선진국의 도시화율은 75%를 정점으로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우리의 도시화율은 90%를 지나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견된다.

회적 관계의 재편에 있다. 30년 이상 지속된 이촌향도의 인구이동은 농촌에 터하여 살던 전통적인 삶의 관계를 해체하고 도시의 이차적이고 수단적인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변화를 수반했던 것이다. 한국사회의 급속한 근대화는 인구의 절대다수가 빠른 시일에 농촌에서 도시로 옮겨가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가 전통농촌적인 것에서 근대도시적인 것으로 빠르게 바뀔 수 있었던 덕택이었다. 이런 점에서 ‘농촌으로부터 인구의 대탈출’은 한국의 5천 년 역사에서 최초의 진정한 혁명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한강의 기적은 그 결과일 뿐이다.

지금의 이농 2세대들이 1세대 부모들이 남긴 사회·계층적 기회와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상황이며, 그런 만큼 도시사회는 1세대 때보다(주로 1960, 70년대) 훨씬 더 질서화되고 위계화된 구조로 분화되어가고 있다. 2세대 이후 도시인들은 이전 짜여진 계층적 질서와 의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들간의 사회경제적 역량 차이는 그에 따른 사회공간의 분화를 초래하고 있다. 도시사회의 이러한 사회공간적 열거는 도시인들의 계층화된 일상관계를 통해,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도시정책(예, 도시계획, 고용정책)이나 도시통치구조를 통해 재생산되는 단계에 이르러 있다.

이렇듯 도시로 인구의 대이동과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 합리적 삶의 관계가 도시공간을 통해 형성되는 결과가 곧 근대 한국사회의 등장과 발전이다. 즉,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사람 수가 늘어 도시의 규모를 물리적으로 확장시키며, 나아가 그 내에서는 생존과 생활의 활동을 둘러싼 밀도 높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가운데 조직적·집단적 관계의 형성과 분화, 집단별 문화적 지향과 이념의 다원화와 내파화(內破化), 계서화(階序化)된 사회질서와 제도의 구축, 그에 수반된 권력관계의 집적과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로 도시사회는 정치적·경제적·시민사회적 영역화와 분화를 겪게 된다.

이런 점에서 도시화에 따른 도시사회변화의 일차적 특징은 권력의 집중과 그에 따른 정치영역의 형성이다. 근대화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작용망의 거점으로 기능하는 가운데 도시는 그러한 과정을 촉진시키고 심화

시키는 방향으로 질서화하고 제도화해가는 거대한 권력적 작용이 집중하는 곳으로 변모하게 된다. 서울은 본래부터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지던 활동을 집중시키는 중심거점으로 기능해왔으며, 해방 이후 국가주도적 근대화 과정에서 근대화의 흐름을 집중시키고 통제하는 장소로 거듭났다(조명래, 2001b). 수도로 거듭난 서울은 한국의 공간통치에서 변함없는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⁷⁾ 국가권력의 핵심부가 집중함으로써 서울은 국가정치를 만들어내는 공간이 되었고, 덕택에 일개 도시이면서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사회의 핵심부문이 형성되는 곳이 되었다. 전국인구의 4분 1, 국가의 총업무단위(국가고유업무, 국가위임업무, 지방고유업무로 나누어짐)의 70%, 국가권력의 상층부가 집결된 서울에는 국가의 정치적 작용이 가장 밀도 높게 일어나는 정치사회가 구성되어 있다.

물론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권력과 서울이란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권력의 층위는 다르다. 다시 말해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서울이란 공간에 작동하는 정치권력은 중앙정부나 국가 전체와 우선적으로 관련되는 것인만큼, 서울이란 공간에 고유하면서 자율적인 정치권력(도시정치)과는 다른 것이다. 중세 서구도시의 경우, 도시에 사는 거주자와 통치자와의 갈등이 시민권력의 출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서울이란 공간 내에서 권력갈등은 서울시민과 서울을 다스리는 지배층과의 관계라기보다 서울에 거주하게 된 국가정치의 지배자와 그에 맞서는 저항적 시민집단 간의 대립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비록 국가정치와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국가-시민 간 갈등이 서울의 시민사회를 주무대로 설정된 덕택에 서울은 그 어느 도시보다 일찍이 ‘정치사회’(political society)란 영역을 가지게 되었다.

근대화의 기간 동안 국가권력은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위해 자본을 공급하고, 기업활동을 규제하며, 생산요소를 할당하며, 저임금 유지를 위해 노동을 통제하는 것 등과 같이, 이른바 축적부문을 조절하는 것으로 우선

7) 국무총리 직할의 특별시로서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차별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서울에게 부여된 지위이다(조명래, 2000).

사용되었다. 그 결과 자본-노동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근대자본주의적 사회적 관계가 빠르게 형성되어갔다. 공간적으로 볼 때 발전정책의 효과는 서울로 집중함으로써 자본형성, 기업창업, 생산관계의 통제, 물류, 금융흐름의 집중화를 자연스럽게 초래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서울이란 사회공간 내에는 한국경제의 핵심부문이 자리잡게 되었다. 서구의 역사에서 이는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체계의 발달과 근대경제조직(예, 기업화, 조합화)의 구축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즉 봉권권력에 대항해 도시의 상공인들은 정치권리를 획득한 후 자유경쟁을 통해 상품생산과 교환관계를 끊임없이 확장시킨 결과, 광역의 시장체제를 구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는 근대사회의 출현, 그리고 부르주아 시민계급의 등장을 초래했다.

우리의 도시에서 이러한 현상은 국가주도적 산업화가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됨으로써 자본-노동의 계급관계와 생산-소비 순환의 결절이 도시사회의 중요한 부문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근대경제활동이 밀도 높게 집중된 덕택에, 정치사회와는 구분되는 ‘경제사회’(economic society)가 도시사회의 중요한 일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거기에는 위계·통합·공동체적 이익을 우선하는 국가권력의 작용방식과 다른 시장·경쟁·개인적 이익을 우선하는 시장권력이 작용하는 것이 제도화된다. 이렇게 해서 ‘정치사회’에 이어 ‘경제사회’가 도시사회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구축되었다.

2) 시민사회의 분리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일차적인 이해관계를 설정하는 부문은 먹고사는 것과 관련된 경제영역이다. 돈을 벌기 위해 취직을 하게 되면, 도시인들은 하루의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는데, 이러한 영역의 집합이 곧 도시의 경제사회를 이룬다. 하지만 도시인들의 삶은 이 영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용 및 생산활동과는 별개로 가족의 성원을 교육시키고, 여가를 보내며, 정신적 욕구충족을 위해 문화예술이나 종교 활동에 참가하거나, 사회결사적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새로운 삶의 공간을 만들게 된다. 이러한 개별활동의 집합화는 정치사회나 경제사회와는 별도로 도시인들이 시민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자율적인 생활영역을 구성하게 되며,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이 영역은 급속히 확장되어간다. 서울의 경우, 198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도시인들은 정치와 경제세계와 다른 개성화된 생활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시켜갈 수 있는 세계를 조금씩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서 생긴 도시적 삶의 새로운 차원이자 영역이다.

도시에서 자율적인 생활세계의 등장은 이렇듯 자생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역으로 도시사회체제에 의한 생활세계의 침해를 주목하면서 이를 의도적으로(운동적으로) 지키려는 가운데서도 나타난다. 서울의 경우, 소득이 향상하기 시작한 1980년대 중·후반부터 정치경제적 영역, 즉 체제의 영역에서 과생된 폐해(예, 국가주택정책의 실패나 상품화의 진전에 따른 주택가격의 급상승)가 생활세계(예, 가족의 주거생활)의 여러 곳을 파열시키는 현상을 시민들이 점차 인식하게 되면서 이를 저항하고 지키려는 자의식 노력이 생겨났고, 그 결과 생활세계란 시민들의 자율적 삶이 전개되는 공간이 열리게 되었다.

생활세계의 열림은 이렇듯 개인으로서 도시인들이 도시체제의 규정력에 맞서 그들의 사익을 공민적 권리로 실현하는 자의식적 노력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자의식 노력은 도시의 다양한 주민운동, 공동체운동, 시민단체운동, NGO운동이란 형태로 나타났다(조명래, 2000b). 이러한 집합적 실천은 국가나 시장의 권력에 의해 침해받는 생활상태나 일상관계를 시민들이 시민권을 내세워 주체적으로 지키는 실천과정을 내부화하고 있다. 가령 세입자운동, 철거반대운동, 주거권실현을 위한 주민운동은 국가나 시장실패로 집값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주거권이 제약받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국가에 대해 주택공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세입자의 경우 임시주거지의 건설을 요구하는 운동이다. 그밖에 환경권을 내세워 지역주민들이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을 상

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환경운동, 고용의 평등권을 내세워 근로여성들이 아동보육 내지 양육시설의 확충을 시정부에 대해 요구하는 여성운동, 보행권을 내세워 시정부에 대해 동네 교통환경개선을 요구하는 교통운동, 소비자 권리를 내세워 주부들이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식품의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소비자운동 등도 모두 국가나 시장의 실패로 침해받는 생활세계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시작되며, 그 실현은 사적 생활의 문제를 시민권적 문제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노력들의 집합화된 현상이 곧 시민운동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 사회운동의 지배적인 형태는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정치영역의 운동), 노동3권의 실현이나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노동운동(경제영역의 운동)이 지배적이었던 것에 비해, 1980년대 중후반부터는 도시인들을 중심으로 생활상의 쟁점을 시민권적 문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운동이 활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시주민들의 이러한 자의식적 노력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도시사회의 성원, 즉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도시사회 내에서 정치사회와 경제사회를 비집고 그 중간에 시민권적 삶이 설정되는 시민사회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도시사회는 정치사회와 경제사회의 분화에 이어 시민사회가 분화됨으로써, 정치-시장-시민사회 간 정합구조를 품게 되었다. 정치사회는 국가권력을 제도화하는 영역으로 존재한다면, 경제사회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 상품거래의 관계, 화폐적 거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의 질서와 그 권력이 제도화되는 영역으로 존재한다. 이 양자는 현대사회의 체제적 층위를 구성하고 있다. 반면 새롭게 열린 시민사회는 도시주민들이 그동안 개인으로 살던 사적 영역을 박차고 나와 처지가 비슷하거나 지향성이 비슷한 사람들이 공민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터전이 구축되는 공적 공간이다.

그러한 공간의 출현은 시민들이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적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는 집합적 주체로 거듭나는 변화가 배경적 요인으로 작용

한다. 이러한 집합적 주체의 전형이 시민사회단체 혹은 비정부기구(NGO)인데, 이들은 대개 도시를 무대로 하여 등장하고 성장한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등장한 시민사회단체의 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시민사회를 출현시키고 육성시키는 공간적 인큐베이터라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4. 도시 시민사회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에서 시민사회가 정확히 언제부터 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지만 대체로 1987년 6월 시민항쟁을 계기로 하여 서서히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이가 합의하고 있다(정태석, 2000). 앞서 살펴본 도시를 통한 시민사회의 출현은 한국 시민사회의 출현 그 자체와 같은 것이다. 이렇듯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가주도적 근대화의 공간적인 결과인 도시화 속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한국의 압축적 성장의 흔적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러니 서구의 시민사회가 긴 시간을 거치면서 단계별로 갖추게 되는 상이한 시간대의 특성들이 현재의 한국 시민사회 내에 함께 혼재해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한국 시민사회는, 보는 각도에 따라, 국가의 강권적 지배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과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면서 열린 자유주의적 이상을 함축하고 있는 ‘로크적 시민사회’(자유주의 시민사회), 자유로운 시민적 삶이 아직 질서화가 안된 결과 사회성원들의 본능과 특수한 욕구에 기초하여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여 자기해체적인 속성을 갖는 ‘헤겔적 시민사회’(욕망체계로서 시민사회), 자유시장경제활동으로 질서화되면서 자본주의적 이념과 계급관계를 반영하는 ‘맑스적 시민사회’(즉, 부르주아 시민사회), 정치와 경제로부터 분리된 생활세계가 확장되어 열리는 ‘그람시적 시민사회’(즉, 제3의 영역으로서 시민사회), 이것이 더욱 발전된 사회적 공동선의 문제를 숙의하는 공공담론의 장인 ‘하버머스적 시민사회’(즉, 공공영역

으로서 시민사회) 등의 특성 모두를 가지고 있다.

전체의 형국을 본다면, 한국의 도시적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민사회를 대비시키는 자유주의적 시민사회를 넘어, 그람시와 하버머스류의 시민사회, 즉 정치와 경제로부터 분리되는 삶의 재생산영역(즉, 제3의 영역)이면서 공공영역으로서 특징을 갖추어가고 있어, 그 내면의 구성은 상이한 발전대에 형성되는 시민사회적 속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도시 시민사회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여러 층위들을 치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아래에서는 ‘시민주체화의 문제’, ‘경제로부터 생활세계의 분리의 문제’, ‘시민권의 문제’, ‘시민사회의 자율성 문제’로 그 층위를 나누어 살펴본다.

1) 시민 주체화의 문제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인구이동이 감소하는 동시에 인구이동세대가 낳은 2세대가 서울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인구의 사회적 구성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농 1세대와 달리 2세대들은 도시적인 고용관계와 생활관계 속에서, 그리고 부모의 사회계층적 조건이 승계되어 재생산되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 들어 서울의 산업경제가 첨단화되면서 서울 사람들의 고용관계는 생산직 대 전문직, 상용직 대 임시직으로 분화되는 것을 바탕으로 신중간층과 신하층간의 분화와 같은 계층적 분극화가 나타나고 있다.⁸⁾ 거기에 덧붙여 상이한 계

8) 서울의 사회적 불균형은 이제 서울이란 도시사회 내에 있는 집단간·부문간·지역간 분화나 차별화가 재생산되는 것에 의해 특성화되는 단계에 와 있다. 집단간 분화는 근자에 들어 더욱 세분화되면서, 불균형은 비단 거시적인 집단간 차이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인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후자의 예로는 정상인과 대비되는 장애인, 남성에게 대비되는 여성(특히 저소득층 주부), 장년층에 대비되는 청소년 및 노령층, 고학력 소지자에 대비되는 저학력 소지자 등이 서울의 새로운 사회적 약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근자에 나타나고 있는 서울의 사회적 불균형은 IMF 위기가 끼친 계층별·집단

층적 배경을 가진 인구집단들이 지역별로 나누어져 거주하면서 사회공간적으로 계층화되는 현상(예, 서울의 강남·북 격차)마저 생겨나고 있다(조명래, 2001f).⁹⁾

별·부문별 고용기회의 양극화, 그리고 위기 이후 서울(한국)의 사회적 삶을 질서화하고 조절하는 힘,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경쟁논리’에 따라 소득계층간 소득수준이나 생활기회가 분극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IMF가 끼친 가장 중요한 영향은 고용기회의 차별이다.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업이나 불안정 임시직의 양산,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중산층의 붕괴 등이 IMF가 끼친 사회적 불균형 심화의 흔적이다. 반면 위기 이후에는 구조조정의 여파로 구산업의 퇴출과 신산업(예, 벤처, 주식, 서비스업, 외국인 직접투자부문 등)의 등장, 노동의 유연화에 따라 상용직의 감소와 임시직의 증가, 사회 각 분야로 만연한 경쟁논리에 따른 개인별 격차의 심화(예, 업적제, 연봉제, 스카우트 등에 따른 개인간 격차 심화) 등의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의 결과를 집약하는 것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격차가 경제발전이 시작된 이래 최고치에 달하고 있는 현상이다. 서울은 이제 계층·계급화된 사회로 자리잡아가는 듯하다.

이렇게 해서 서울의 인구들은 나름대로 질서화되고 구조화된 계층·계급적 지위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IMF 위기 이후 만연하는 신자유주의 논리(시장을 통한 경쟁논리)는 시장거래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량에 따라 서울 사람들의 삶을 나누고 차별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 9) 서울의 사회불균형은 공간적인 조건에 의해서도 재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이한 계층적 배경을 가진 인구집단들이 지역별로 집단적으로 나누어져 거주하면서 생긴 결과이다. 물론 이러한 공간분화는 일차적으로 토지이용을 배분하고 하부구조나 공공시설을 배치하는 도시계획을 매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주택공급정책이나 산업생산활동과 관련된 정책 등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기도 하며, 아울러 도시 내의 지역별 노동시장, 산업 및 문화 활동의 분포, 구별 인구구성 등의 조건이 결합되어 그 분화가 더욱 고착화되기도 한다. 이런 연유로, 현재 서울의 구별·지역별 격차가 현격히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강남구의 급성장은 그곳으로 고소득 첨단 신산업 활동이 집중하면서 그에 따른 고용기회의 집중, 고급 소비활동의 집중, 상층 주거인구의 집중 등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면, 반면 강북의 위축은 고용기회의 위축, 사회문화적 기회의 상대적 박탈, 주거생활환경의 악화,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의 상대적 감소 등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구별·지역별 격차는 그 자체로 그 다음 단계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조건이 되어, 그곳에 집단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활동기회의 차별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를테면 서울의 신산업을 주도하는 벤처·서비스업, 사이버시대 생활기회를 좌우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인터넷, 문화시대 문화적 시설의 접근기회 등은 근자에 들어 강남·북 간 격차를 구성하는 새로운 국면이 됨으로써 양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 사회경제적 기회의 새로운 차이를 불러오고 있다. 구별·지역별 이러한 차이는 지역별 자치의 역량, 주민들의 정치적

도시 사람들은 이제 본격적인 자본주의 일상관계 속에서 화폐적인 거래를 통해 생활수단을 구입하고 소비하며 이를 매개로 이차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합리적 사회과정을 통해 살아가고 있다. 실제 도시적 삶의 변모한 측면을 보면,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또한 중산층적 생활양식이 확산되면서 도시인들은 합리적이고 계약적인 규준에 맞추어 사회적 상호관계를 유지해가고 있다. 그래서 그간 혈연적·연고적 집단을 중심으로 하던 집합적 삶도 점차 도시에 살면서 겪게 되는 생활상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결사체적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도시주민들은 사적 주체에서 사회적 주체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며, 특히 자의식적인 합리적 시민주체로 태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시민주체의 탄생은 서구의 시민사회 등장시 교양있고 합리적 사고를 했던 자유상공인 계급의 출현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도시시민사회의 열림은 이러한 시민주체의 등장에 힘입은 것이며, 역으로 합리적 시민주체의 등장은 도시의 사회생활에서 합리성이 중요한 실천규범이 됨을 암시해준다.

한국 시민사회가 어떠한 것인지의 쟁점은 바로 합리적 시민주체의 내면세계와 합리성의 내적 구성 여하에 달려 있다. 시민사회의 출현은 그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합리적 시민주체의 등장을 필수적인 조건으로 하지만, 한국의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등장하는 시민주체는 한 개인으로 볼 때 내면적으로 불안하고 다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전근대로부터 근대, 탈근대로 급속히 이루어지는 시간변동 속에서 출현한 도시의 근대적 시민주체는 일생을 살면서 체험한 상이한 시간대(時間帶)의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 점진적인 변혁을 통해 형성된 서구 시민주체들이 등질적인 시민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과 대조가 된다. 서구의 시민주체들은 사회성원들간의 치열한 갈등과 투쟁을 통해 등장했으며 그런 만큼 만인에게 이로운 (공동선을 전제하는) 공정한 게임 룰을 준수하는 ‘절제된 행

성향 등의 차이를 가져오는 조건이 되면서 거꾸로 지역간에 공공부문의 투자, 사회문제해결의 정치적 역량의 차이를 불러온다.

위'를 미덕으로 삼는다. 이에 견주어, 압축적 성장 속에서 등장한 우리의 시민주체는 다면적 가치관과 행태적 기준을 추종하는 행위를 선호하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주체화의 불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시민사회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2) 경제로부터 생활세계의 분리문제

근대적 시민사회가 출현하는 가능성은 경제영역에서 생산과 소비의 분리다. 즉, 진정한 시민사회는 정치와 경제로부터 자유로운 제3의 영역이 분리되는 것을 통해 등장하는데, 이의 가능성은 사적 영역에 혼재되어 있던 '경제로부터 생활세계의 분리'이다. 이 분리는 현상적으로 직장과 주거의 분화, 노동과 여가휴식의 분화, 생산으로부터 재생산의 분리, 경제적 삶으로부터 문화적 삶의 분리가 누적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하지만 경제로부터 생활세계의 분리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국가에 대비되는 영역'으로 시민사회(사적 영역) 내에서 그간 혼재되어 있던 사적인 생활영역과 준(準)사적인(혹은 공적인) 경제활동영역(예, 고용관계, 기업관계 등)이 분리되어야 한다. 이 분리를 통해, 후자는 상품·화폐·자본의 권력을 행사하는 시장사회(경제사회)로 제도화되는 반면, 전자는 시민들의 생활세계로 제도화되며, 이것이 곧 시민사회로 출현하게 된다. 하지만 후자의 영역, 즉 시민의 생활세계가 시민사회로 출현하기 위해서는 그간 사적 영역으로 범주화되어 있던 생활세계를 순수한 개인적 영역(즉, 프라이버시의 영역, 가족생활의 영역 등)으로부터 분리하여 시민권적 생활관계로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분리된 시민권적 생활영역은 종교활동, 여가활동, 교육, 문화예술활동, 각종 결사체적 활동, 심지어 정치활동(예, 투표권 행사)을 통해 사적 삶이 사회적으로 재생산되는 영역이다. 이 영역은 정치와 경제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삶이 국가제도가 규정하는 공민적·시민권적 삶으로 재정의되는 영역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생산영역은 자동적으로 출현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생활상의 문제를

공동의 사회문제로 제기하여 논의하고 투쟁하는 공공담론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결과로 형성된다.

시민사회 출현과 관련해서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다. 즉, 사적인 영역을 공공영역으로 전환하여 시민권적 삶이 재생산되는 곳으로 바꾸어가는 가능성이 곧 시민사회 존재의 명확성과 건강성을 확인시켜주는 지점이 된다. 우리의 도시 시민사회를 들여다보면, 그간 치열한 정치적 투쟁과 사회변혁운동들이 국가부문으로부터 점차 시민사회부문으로 향한 덕택에 시민사회 내를 공공영역화하는 정도가 근자에 들어 현저하게 진전되었다. 실제 1990년대에 들어 시민사회영역은 활발한 사회운동의 장으로 바뀌어졌으며, 이는 과거 반독재운동,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운동가들이 시민사회 내의 변혁을 주도하는 운동가로 변신하는 것에 크게 힘입었다. 여기에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사회참여 욕구가 커진 일반 시민들이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시민사회적 쟁점은 보다 광범위한 시민논객의 참여를 불러와 두터운 공공담론의 장이 시민사회 내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발전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가 공공영역화되는 것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왜곡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건전한 시민의식의 부족, 자의적 시민참여의 부족, 민주적 관행의 부족, 사회적 권력의 불균등 분포, 재벌언론의 독점, 국가의 감시와 통제 등은 모두 시민사회 공간이 개방적이며 평등한 공공담론의 장으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다. 이러한 장애물들은 대개가 우리 사회구조가 깊숙이 가지고 있는 모순과 퇴행적 요소들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이 되거나 척결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 다시 말해 이러한 장애물들은 시민사회문제 이전의 전체사회의 비민주성이나 문화적 모순 등과 결부된 것으로 그 해결을 시민사회 밖(국가나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면 우리의 도시 시민사회는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3) 도시운동과 시민권(력)의 문제

시민사회 형성 정도는 그 내용에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자의식적인 집합적 실천을 하느냐, 그리고 이를 통해 시민권적 삶이 어느 정도 보장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 모든 것은 시민사회의 정치화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 시민사회의 정치화는 시민사회 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치사회·경제사회의 경계를 침투하면서까지 이루어지는 ‘시민권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한국의 도시와 관련해서는 1990년대 들어와 도시공동체운동¹⁰⁾ (이하 도시운동)의 활성화를 시민사회 정치화의 한 현상으로 간주해볼 수 있다. 1960, 70년대의 빈민운동, 주거운동으로 시작된 도시운동은 1990년대 들어 아파트자주관리, 공동체마을만들기 운동과 같은 것으로 확대하면서 다양한 파생적인 운동을 출현시키고 있다(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조명래, 2000b 참조).¹¹⁾

서구사회에서 시민권은 투쟁의 결과였던 것에 반해, 우리 사회에서는 투쟁과 관계없이 제도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운동을 통해 도시주민들은 자유주의 시민사회론자들이 말하는 ‘국가지배에 맞서는 시민권’(참정권)의 제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생활권익의 보호와 실현을 권리로 요구한다. 이를테면, ‘출판·신체·표현·종교·이전·사상의 자유’를 쟁취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공급, 세입자의 주거시설 확충, 여성의 평등고용보장, 보행자의 보행공간확보, 소비자의 안전소비,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보전을 요구하는 게 도시운동이 지향하는 시민권의 실현내용이다. 한편 도시운동은 기존 제도를 벗어나는 대안적 가치를 새로운 권리와 제도로 만들어가는 것도 추구한다. 가령 소비자공동체운동,

10) 이는 달리 도시주민운동이라 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를 대상으로는 하는 시민운동과는 구분되지만, 크게 보면, 시민운동의 한 하위 유형이라 할 수 있다.

11) 도시지역의 공동체운동은 현재 주거공동체운동(예, 세입자운동, 아파트자주관리운동, 공동체마을운동), 환경공동체운동(예, 녹색아파트운동, 생태마을운동, 생태자치구운동), 경제공동체운동(예, 녹색가게운동, 생활협동조합운동, 지역통화운동), 문화공동체운동(예, 지역축제운동, 대안학교운동, 사이버공동체운동), 자치공동체운동(예, 주민자치센터운동, 지역자치운동, 민회운동) 등으로 다기화되어 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민회운동, 지역화폐운동, 대안교육운동 등은 기존 시장적 소비방식, 정치제도, 교환제도, 교육제도 등의 한계를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실천운동들이다.

도시운동은 도시주민들이 살면서 집단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한편으로 정부정책에 맞서서 해결하고자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생활세계를 스스로 바꾸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도시운동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불합리한 권력에 맞서 자율적인 시민권력을 형성하는 것을 꿈꾸고, 나아가 이를 시민권으로 실현해내는 것을 지향한다. 주목할 것은, 오늘날의 도시운동은 국가권력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상황, 즉 지방자치와 연계하여 시도됨으로써 시민권도 주민자치 혹은 생활자치 속에서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 종전의 사회운동이 국가권력을 대칭으로 하였다면, 도시운동은 생활세계를 제약하는 미시적 권력에 대응하는 시민권력의 자율성을 획득하고자 한다.

도시운동의 이같은 특성은 거대담론에 매몰된 시민사회론자들이 제대로 주목도, 평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시민사회를 밑으로부터 내밀히 열어주는 힘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기능성과는 달리, 현실에서 시민권력을 추구하는 도시운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많은 경우 도시운동은 제한된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단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태반이다. 또한 운동 자체가 일부의 힘있는 시민에 의해 주도되거나 관료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시민사회의 미덕인 개방성, 창조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는 곧 도시운동의 정당성 상실이란 문제를 낳게 되는 원인이 된다. 또한 도시운동은 쟁점이 분명할 때만 주로 이벤트 형식으로 꾸러지는 경우가 많아, 운동쟁점이 사라질 때면 덩달아 동력을 잃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도시운동이 당초 요구했던 시민권(혹은 주민권)의 실현은 미완으로 남게 되며, 이는 도시운동의 사회적 책임문제를 후속적으로 발생시킨다. 개별시민의 차원을 보더라도 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것에 비해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무심할 정도로 소홀히 한다.

크게 보면 이러한 상황은 사회제도 전반의 문제와 관련되는 측면도 없

지 않다. 이를테면, 출판·신체·종교·사상·결사의 자유가 국가에 의해 여전히 통제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은 그들의 자유로운 권리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또한 그런 상황에서는 권리행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켜갈 수 없게 된다. 제도적 제약 속에서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시민권으로 요구하는 장애인의 복지권, 세입자의 주거권, 여성의 평등고용권, 소비자 권리, 보행자의 보행권, 주민들의 환경권 등도 쉽게 실현될 수 없다. 도시운동은 지방자치의 매개로 활성화되고 있지만,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불완전하며 또한 관주도적인 문화가 여전히 팽배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치를 활용해 시민권(력)을 지키는 데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도시운동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이같은 행태적·제도적 제약들은 시민권력이 관철되는 능동적인 시민사회를 만들려는 시민들의 집합적 실천에 근본적인 한계를 그어주고 있다. 그 한계는 지금 막 열리기 시작한 도시 시민사회 자체를 지탱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

4) 시민사회의 자율성 문제

시민사회의 가능성은 국가의 권위적 통치와 시장경제의 힘으로부터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정도, 즉 '시민사회의 자율성' 정도에 달려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 자율성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민단체들이 반민주화투쟁,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저항,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가운데 국가권력의 행사를 통제하면서, 그리고 임금투쟁, 고용보장요구, 소액주주운동, 기업감시, 경영참여운동, 물가감시 소비자권익보호 등을 전개하는 가운데 기업과 시장의 권력을 제한하면서 크게 신장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시민사회의 자율성 신장은 시민사회 내에서의 자의식적인 중간계층의 성장, 노동조합과 같은 이익단체의 급증,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치참여 등의 직접적인 결과일지 모른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자율성은 근본적으로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에서 국가와 시장의 권력이

시민사회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을 때 진정으로 신장하게 된다. 지금까지 시민사회의 자율성은 국가의 강권적 지배와 통제로부터 시민들이 자율권을 획득하는 정도로만 여겨왔다. 이런 측면의 시민사회 자율성은 그동안 국가권력의 민주화를 통해 어느 정도 신장하였다. 하지만 시장이 국가의 역할을 대신해가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시민사회의 자율성은 전지구화되는 시장권력으로부터 특정 장소에 터한 시민들이 공동체적 삶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꾸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게 되었다.

한편 국가적 시민사회와 달리 도시 시민사회의 자율성은 복잡한 국가권력의 재편과 시장경제에 대한 공동체적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증진된다. 우선 정치적 영역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과 책임의 재배분, 지방정부 권한의 확대, 지방정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 정도 등에 의해 도시 시민사회의 자율성은 달라진다. 우리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지방자치가 복원되면서 도시정부의 자치권한은 크게 증대했고, 그와 더불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의 자치과정에 도시주민들이 참여하는 폭이 커지면서 도시 시민사회의 자율성도 크게 신장하였다. 앞서 살펴본 도시운동의 활성화는 이의 중요한 지표이다.

하지만 도시 시민사회의 자율성 또한 현실에서는 많은 제약 하에 있다. 국가관료주의의 팽배와 그에 따른 시민정치문화의 빈약, 불완전한 지방자치로 인한 시민참여의 제한,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우월의식과 실질적인 간섭, 시장적 경쟁논리를 추종하는 정책(탈규제화, 민영화 등) 등으로 인해 도시 시민사회의 자율공간은 전체 시민사회에 비해 협애하게 열려 있다. 근자에 들어 신자유주의 논리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영역을 침투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결속과 자율성이 외부로부터 해체되는 상황마저 맞고 있다. 보다 심각한 것은 도시 시민사회의 태생적 한계, 즉 형성과정에서 퇴적되어 있는 시민주체들의 분열적 의식·지향성·이념·행태 등이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내부로부터 부식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다.

5. 한국도시의 시민성

1) 도시 시민사회의 미성숙

국가의 강권적 통제와 개인의 사적인 이익, 공동체적 논리와 시장적 논리가 마주치는 시민사회는 늘 갈등하는 기운들이 넘실대지만, 공공영역으로 시민사회가 소통과 숙의를 통해 갈등하는 견해·의견·요구들을 중재하게 되면, 탈락과 선택의 과정을 통해 제도와 권리 그리고 공공적 의무관계로 담아내게 된다. 따라서 시민사회에서 국가는 강권적인 권력성을 순화시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재정의해야 하며, 반면 개인은 정제가 안된 사적인 사고·요구·이해를 사회 전체가 규정하는 도덕적·사회적·제도적 규준에 맞게끔 적용하면서 ‘나의 것’보다 ‘타의 것’, 그래서 공공성을 우선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시민사회영역에서 시민은 순화되고 교양을 갖춘, 그러면서도 도덕적이며 공중적 예의를 갖는 주체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개인이 시민으로서 거듭남은 시민사회에 가입하는 주체·집단·제도를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가 ‘제3의 가치’인 ‘사회공공’적 가치로 전환된 것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가 이러한 갈등처리 능력을 갖게 될 때, 시민들의 사회문화적 삶은 정치와 경제의 속박으로부터 자율적이 되며, 또한 안정된 재생산을 할 수 있게 되어 도시사회의 문화적 다원화와 풍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시민사회의 성숙은 바로 이러한 갈등과 재생산 조건의 누적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두 가지 기본 기능, 즉 ‘갈등(처리)’와 ‘재생산’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과 창조적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시민사회의 성숙을 위해 이 두 기능은 보다 적극적으로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층위의 갈등은 시민사회의 성숙을 위한 기회이자 자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갈등이 숙의와 조정을 통해 타협되어 제3의 것으로 발전되지 못한 채 시민사회 내에 퇴적되면, 시민사회공간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전면화되는 탈근대의 야만상태

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갑자기 열린 시민사회란 공간 안에 상이한 시간대의 사회성을 반영하는 의미·행태·규범·제도들의 파편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데서 연유한다. 역사적 유제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상이한 시간대의 파편들은 한국적 ‘시민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질료들이다. 즉, 가부장적 정체성, 연고주의적 정체성, 전시민적인 정체성, 자본주의적 정체성, 화폐적 정체성, 대중적 정체성, 개인주의적 정체성, 탈국가적 정체성 등과 같이 긴 시간을 통해 형성된 개별 정체성들이 병렬적으로 결합된 채 다원적이면서 동시에 분열적인 ‘정체성의 역학구조’를 만들고 있다. 개별 정체성들은 이를 에워싸고 있는 사회문화 전반의 미성숙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걸러지지 않은 채(즉, 시민적 코드로 전환이 되지 않은 채) 집단·조직·제도의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확장된 사회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하고 있다. 이로써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합리성의 구현이 제약되고, 공익 혹은 시민적 공공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관계의 형성이 어려워지며, 또한 그에 따라 사회적 책임도 불명확해진다. 이러한 요소들의 집합 장으로 형성된 결과, 도시 시민사회는 물적 공간으로선 확장되었지만, 기능 측면에서는 상이한 주장과 요구를 숙의하고 조절하는 역량을 결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량의 결여는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시민사회를 제3의 영역, 즉 ‘시민들의 문화적 삶이 재생산되는 영역’으로 지켜낼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고, 또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소를 다원적인 문화구조로 엮어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게 된다. 이는 한마디로 도시 시민사회의 미완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도시적 시민성의 한계: 개인성에서 시민성으로 이행의 미완

한국 도시 시민사회의 미완은 곧 도시적 시민성의 한계를 의미한다. 시민사회의 근대적 성질로서 시민성은 계몽주의적 개인성이 발전되면서 나온 것으로, 그 만개한 모습은 성숙한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

다(이하의 논의는 박승관, 2001에 주로 의거하고 있음).

근대 이전의 인간 정체성은 그가 소속된 ‘집단’, 가령 가족이나 부족 또는 종교에 기초해서 형성되었으며, 이렇게 형성된 집단은 그 소속 구성원들에게 일차적인 의무적 구속을 가하게 되며 그 결속은 기계적이다(뒤르케임의 유기적 연대의 반대적인 것). 그리하여 그들은 인간 외적, 그리고 인간 상위의 권능에 복속되었으며, 그 결과 인간의 내재적이고 개인 특수적인 욕구·필요·가치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박탈당한 상태에 있게 된다. 근대 계몽주의가 등장하기 전의 개인은 이렇듯 인간으로서 존재했지만 개인으로선 존재하지 못했다.

근대적 계몽은 ‘인간’으로 하여금 계몽적 자의식과 자아감을 불러내 전통적인 ‘집단의 굴레’(regime of collectivity)를 해체시키는 동시에 근대적 ‘개인’으로 거듭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 자신이 본유한 독립적이며 독특한 사고·감정·목적·이익, 그리고 이성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전적으로 새로운 하나의 인종, 즉 개인으로 재탄생했다”(박승관, 2001: 2). 칸트(Kant, 1784/1996)는 개인성을 ‘근대적 계몽’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원동력으로 간주했으며, 그래서 밀(Mill, 1859/1975)에게 있어서 “근대적 개인은 인간정신의 도덕적 용기로 무장함으로서 ‘의견의 전제’(tyranny of opinion)와 ‘관습의 압제’(despotism of custom)에 대항해나가는 한편,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자발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주체적 자유와 그 자유에 바탕으로 두고 형성되는 자율적 의견에 기초해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박승관, 2001: 2).

하지만 이렇게 태어난 근대적 개인 혹은 자아는 여전히 현실사회에서, 즉 다양한 개인이 타자가 되어 서로의 계몽적 역량과 사적 이해를 섞어서 살아가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새롭게 태어날 역정을 남겨두고 있다. 여기서 개인성이 이러한 사회적 과정을 통해 거듭날 때는 이른바 시민성이 된다. 실즈(Shills, 1997)는 ‘시민성’(civility)을 시민적 덕성(civil virtue)으로 간주한다. 그에 의하면 시민성이라 함은 “근대적 인간이 자기자신만을 위한 협애하고 이기적 특수이익에의 경도를 자제하고, 공동의 이익에 우선

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와 특유의 심리적 준비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달(Dahl, 1989)은 시민적 덕성을 공공선에 대한 헌신, 또는 관련 집단의 총체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각적 의도로 보았다. 즉, 시민성은 이웃들의 필요에 대한 공감의 능력이며 공동체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자발적 봉사의 의지로 정의된다(박승관, 2001: 3). 그것은 하나의 특별한 사안이나 정책을 타인들의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상의 자질로서 경쟁보다 협동, 개인적 합리성보다 사회적 합리성, 사익보다 공익, 획일성보다 다원성을 선호한다.

시민성의 행태적 속성은 숙의나 담론이다. 즉, 시민성의 발현은 근대적 개인들이 공공영역을 만들어 참여하면서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문제들을 숙의하고 논의하며 담론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성의 속성은 하버마스적 공공영역(public sphere)의 형성과 발전을 짝으로 한다. 근대적 계몽은 개인을 출현시켰으며, 이들은 사적 영역(private sphere)의 등장과 확장을 가져왔으며, 이 영역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인’들이 함께하는 공간으로서 ‘공공영역’의 출현은 곧 개인성을 시민성으로 전환을 촉매한 것이다. 물론 시민성의 출현이 공공영역의 등장과 확장, 특히 사적 영역으로부터 분리, 그러면서 국가나 시장의 영역으로부터 자율적인 중간매개영역의 형성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아렌트(Arendt, 1958)의 견해에 따르면 공공영역은 상이한 관점들과 무수한 입장들이 공존하면서 다원적인 시민성이 실현되는 공동의 세계로서, 그 내부에는 복합적인 의미체계가 공존하면서 숙의와 공적 담화를 통해 다원적 공동의 구조로 존재하게 된다. 이 공동의 구조 혹은 틀 안에서 각각이 인간들은 서로 보고 들으며, 이와 동시에 각자 상이한 입장을 지닌 타인들에 의해 보여지며 들려진다(박승관, 2001: 4).

그래서 아렌트에게 공공영역은 바로 ‘더불어 하나 되기’에 의해 매개되는 사회적 공간으로서, 그 내부에서 이같은 다원적이고 이질적이며 상이한 전망들이 상호호명을 하고 있는 상태를 이루고 있다. 아렌트의 공공영역은 사회적 행위자들이 서로 대립 갈등하면서도 소통적인 관계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해내는 기능을 담지하고 있어야 한다. 아렌트의 “공공 영역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가치들과 전망들 사이에 발생하는 자유롭고 열린 양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매개되는 개방적이며 친밀하고 밀집된 소통적 네트워크 체계로 해석된다.” 이 소통적 네트워크가 곧 시민성을 숙성시키는 것이다.

시민성의 이같은 발생론적 입장에서 우리의 도시 시민사회에 생산되는 시민성은 ‘개인성에서 시민성’으로 이행이 완료가 안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이 미완에는 두 가지의 미완이 내부적으로 겹쳐 있다. 첫째는 근대적 개인성이 완전한 형태를 못 갖추고 있는 미완이다. 전통적인 ‘집단의 굴레’에 의해 규정되는 자아, 정체성, 의식의 구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유제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연고주의, 가부장주의, 전근대적인 비합리주의 등이 시민들의 행태, 자아, 정체성 내에 온존하고 있는 것은 근대로의 사회적·시대적 이행이 불완전했거나 짧았던 것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서구의 역사에서 볼 수 있던 치열한 계몽주의논쟁, 시민사회혁명, 계급갈등과 변혁적 시도들이 결여한 채 왜곡된 식민화, 그리고 연이은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핵심주체들간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용하게 된 서구적 가치와 전통적 가치와의 조율을 거치지 못한 것들이 전통적인 자아로부터 근대적인 자아로의 이행을 불완전하게 하였던 것이다.

한편 두 번째 미완은 시민적 자아와 정체성을 1980년대 후반부터 열리게 된 시민사회적 공간에 살아감으로써 그 맹아가 형성되기 시작했지만, 이를 숙성시키는 아렌트류의 공공영역을 만들고 그에게 참여하는 과정을 충분히 갖지 못함으로써 생긴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시민사회 내에 설정된 시민적 정체성이 공적 담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적이고 공동적 가치규범에 복속되고 추종하는 것으로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거기에는 개인의 집합 장으로 시민사회를 에워싸고 근대적 체제와 제도의 폭력성과 억압성, 그리고 반민주성, 그리고 내면에 박동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행태적·의식적 문화구조로 인해 공공담론의 장은 늘

왜곡되고 편향되며, 또한 참여하는 다중의 시민적 주체들간에는 숙의와 합의형성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온존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완의 근대적 정체성, 미완의 시민적 정체성을 다차원의 정체성으로 분열시키고 대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갈등이 중화되어 시민들의 문화적 재생산을 풍부히 하게 하는 밑거름으로 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시민성의 내적 분열과 미숙성에서 모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시민성의 유전자: 시민적 사회성 대 유연적 사회성

시민사회의 사회적 작용을 이루는 세포단위는 시민주체들의 사회적 행태 및 의식의 원형이다. 어느 사회나 사회조직, 제도, 그 작용체계는 그 발생적 토대를 추적해가면서 개인적 행태, 집합적 실천, 제도적 질서체계, 사회적 규범 전체를 형성해내는 행태의식의 원형기제 혹은 유전인자가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적 관계의 유전인자는 사회의 개인적·제도적 구성원들 사이 사회작용의 본원적이면서 원초적인 기제라 할 수 있다. 베버(Weber)는 이를 ‘사회성’(sociality)이라 불렀다. 사회적 관계의 기본적인 양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이 개념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이나 문화들로부터 추출해낸 사회적 행위와 상호작용의 기본형이며 그 성질을 지칭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성은 역사적 응축물이기 때문에, 나라와 시대에 따라 상이해지는데, 우리는 서유럽의 근대적 사회성과 우리가 속한 동아시아의 사회성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것을 상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표 1> 참조).

서구적 사회성은 행위패턴이 도시화된 시민사회의 규범에 의해 조절되는 사회적 관계의 행태적·관계적 규범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래서 시민성(civility)이 서유럽적 사회성을 특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특질이다. 이는 공적인 제도관계, 시민적 코드, 냉철한 화폐적 관계 등으로 표출된다. 서구적 시민성은 이른바 공공영역을 무대로 하여 실질적인 행태적 의미규정

<표 1> 시민적 사회성(civil sociality) 대 유연적 사회성(flexible sociality)

	시민적 사회성	유연적 사회성
행태적 양식	합리적 객관적 공공적 행위	습관적 주관적 사적 감정
관계적 양식	규칙적 개인주의적 소유관계 계약적	항속적 집단적 사적 이해관계 위계적
조직적 형태	경쟁 형식적 제도 시장	협력 담론적 네트워크, 연결 연고적 조직
조절기제	법, 계약 공공적 기준	규범, 신뢰 사인간 합의
영역	공공영역	공공/사적 영역의 혼재
시민사회	강함	약함
국가 전형	서구	동아시아
근대화 과정	장기적/점진적 시민혁명 시장화	단기적/압축적 계획적 발전 산업화

출처: Cho, 1997.

해체로 숙성되어 표출된다. 그래서 시민적 사회성은 공공영역에서 작동하는 시민성의 행태이면서 정중함, 예절바름, 합리적인 행위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시민적 사회성의 논거는 하버마스가 말하는 ‘소통적 합리성’(communicative rationality)에 근거하고 있는바, 이는 곧 계몽주의의 기본 가치에 걸맞은 합리성을 의미한다. 시민적 사회성을 매개로 하여, 공공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화가 제도화되고, 아울러 시민적 사회성의 숙성과 재생산이 제도화된다.

서구의 시민적 사회성은 우리가 속한 동아시아 사회를 특성화하는 ‘유연적 사회성’(flexible sociality)과 대조를 이룬다. 이는 관습적이고 인간상호적이며 주관적인 담론적 관계설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레짐(regime)을 구성한다. 유연적 사회성에 기초한 행위는 한편에서는 전통으로부터 내려온 내생적·감성적·습관적·위계적·비공식적 규범을 바탕으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제도적(서구적) 행위에 부합하는 외생적·합리적·시민적·계약적·형식적 규범들을 혼합하는 발생론적 구성을 이

루고 있다. 그래서 유연적 사회성은 정서적이며 물질적인 소속감과 단결감을 불러내는 상호부조·충성·감정이입·신뢰·선물교환의 행위들을 위계적으로 결합하는 네트워크의 형태를 취하면서 현실사회의 다양한 쟁점을 유연하게 풀어나가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유연적 사회성의 가장 중요한 특질은 “안될 것도 되고 될 것도 안되게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유연성에 있다. 유연적 사회성 속에서는 공공영역과 사적 영역이 엄밀히 변별되지 않는다. 상호충성·상호의존·상호귀속의 네트워크가 공공영역으로부터 사적 영역을 분리하는 경계선을 가로질러져 있기 때문이다. 선물이 뇌물이 되고 뇌물이 선물이 되는 행태는 ‘경계선 넘나들기’의 전형적인 현상이다.

서구의 시민적 사회성이 합리적이고 시민적이며 계약적인 사회적 삶의 제도화를 추구하는 계몽주의적 투쟁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등장했다면, 유연적 사회성은 이러한 발생적 과정을 결여하고 있다. 그래서 유연적 사회성의 레짐 안에는 전래적이고 습관적이며 사적 영역에서 고취되는 행위와 외생적이며 합리적인 공공영역에서 정의되는 행태적 요소들 사이에 이분법적 대립과 긴장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체계가 내포되어 있다. 유연적 사회성이 실제 생성되어 행위로 옮겨지는 것은 경제적·비경제적 행위자들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네트워크는 개인주의적인 ‘시장의 규범’과 공동체적인 ‘위계의 규범’이 가지는 장점을 선별적으로 혼합하는 관계적 망이다. 유연적 사회성은 한국사회 전반에 퍼져 있지만, 특히 복잡한 시민적 삶이 형성되는 도시의 시민사회 영역에서 밀도 높게 퍼져 이른바 ‘유연적 도시’를 만들어내고 있다(Cho, 1997a, 1997b).

도시의 시민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다차원의 가치와 규범의 중층적 대립과 병립으로 나타나고 형성된 것이라면, 이는 우리가 가지는 있는 ‘원형적 사회성’으로부터 발원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성은 다원적 가치의 분열과 봉합의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사회발전의 동태성과 한계성을 동시에 만들어낸다. 다시 말해, 유연적 사회성에 내재되는 끝없는 이항대립적 가치요소들이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서구사회와 구분되는

우리의 ‘시민사회적 다원성과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동시에, 분열과 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두 가지 경로 중에서 도시의 시민사회가 어떠한 경로를 택해나갈지는 우리가 어느 만큼 자의식과 주체성을 가지고 그러면서 공공영역을 통한 의사소통의 과정을 순조롭게 내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7. 결론: 공동체적 시민성을 위해

향후 우리의 도시 시민사회가 나아갈 길은 분열과 대립성으로 이어지는 도시의 갈등을 봉합과 합의성으로 만들어내는 데로 열어놓아야 한다. 그 길은 지금의 ‘미완의 시민성’을 내부적으로 완결된 시민성으로 만들어 가는 길이어야 하지만, 그 길이 반드시 서구의 길은 아니다. 즉, 서구의 ‘시민적 사회성’은 서구사회의 역사적 우연이듯이, 한국의 시민사회가 앞으로 가야 할 당위론적 길은 결국 한국적인 길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시민성은 공동체적 시민성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동체는 시민사회의 공공영역을 무대로 하면서 사적 부문과 제도적 부문을 가로질러 전체를 아우르는 공공영역성을 지칭하는 것이며, 그 속에는 전근대적인 것으로부터 탈근대적인 것에 이르는 폭 넓은 스펙트럼의 규범적·가치적 요소들이 시너지적 상호작용을 통해 제3, 제4의 문명적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도시인들은 스스로의 정체성과 도시의 현실이 함축하고 있는 모순을 올바르게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재 맹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의도적 공동체 형성운동들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시민단체나 NGO들이 단순한 이익집단으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공동체적 원리와 정신을 실천하는 집합적 실천자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이다.

참고문헌

- 박승관. 2001, 「숙의 민주주의와 시민성」, 《관훈저널》 여름호.
- 박준식·김호기, 2000, 「공동체, 시장, 민주주의의 상호관계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콜로키움 발표논문.
- 이신행 외. 1999, 『시민사회운동』, 범문사.
- 정수복. 1994, 「한국시민운동의 역할과 과제」,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공동체 이념을 위한 시민단체 활성화 방안』.
- 신광영. 1991,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경제와사회》 통권 12호.
- 정수복. 2000, 「과연 한국에 시민사회는 있는가?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 모색」, 《시민사회》 창간호.
- 조명래. 1999a, 「도시정치(학)의 문제설정과 쟁점」, 《공간과사회》 제8호.
- _____. 1999b, 『포스트포디즘과 현대사회 위기』, 다락방.
- _____. 2000a, 「한국근대화 속의 서울지방자치」, 《향토서울》 제60권.
- _____. 2000b, 「지역사회의 도전: 도시공동체의 등장과 활성화」, 2000년 지역사회개발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_____. 2001a, 「녹색사회의 탐색」, 한울.
- _____. 2001b, 「지역으로서 서울」, 《황해문화》 여름호.
- _____. 2001c, 「지구화, 신자유주의, 그리고 지방 거버넌스」, 2001년 춘계 한국정치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 _____. 2001d, 「NGO와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의 이해와 확충방안」, 《지역사회개발연구》 제26집 2호.
- _____. 2001e, 「국가론의 녹색화를 위한 시론」, 대화연구소 주관 ‘녹색국가와 녹색정치’ 워크숍 발표논문(2001.11.2).
- _____. 2001f, 「서울의 사회불균형 현황과 해소를 위한 과제」, YMCA주관 ‘치우침 없는 나눔의 지역, 서울 만들기’ 전문가 간담회 발제문 (2001. 10. 30).
- 한국도시연구소. 2001, 「노점상관리방안 중장기 대책의 모색」.
- Arendt, H. 195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o, M. R. 1997a, “Flexibilization through Metropolis: the Case of Post-Fordist Seoul,”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21, No. 2.
- _____. 1997b, “The Flexible Metropolis: Networks, Sociality and Governance in Seoul,”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Sciences*, Vol. 1, No. 1.

- _____. 1999, "Flexible Sociality and the Postmodernity of Seoul," *Korea Journal*, Vol. 39, No. 3.
- _____. 2001, "The Urbanization of IMF Crisis: Impacted Urban Restructuring," 《지역사회개발연구》 제25호 2집.
- Dahl, R. A. 1982, *Dilemmas of Pluralist Democracy: Autonomy vs. Control*,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Habermas, J.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1(T. McCarthy, trans.), Boston, MA: Beacon(Original work published 1981).
- _____. 1989,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T. Burger, trans.), Cambridge, MA: The MIT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962).
- Kant, I. 1996, *An Answer to the Question: What is Enlightenment*, in I. Kant, *Practical Philosophy*(M. J. Gregor, trans. & ed.),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784).
- _____. 1997, *Critique of Pure Reason*(P. Guyer, trans. & ed.),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781).
- Mill, J. S. 1975, *On Liberty*(D. Spitz, ed.), New York, NY: Norton (original work published 1859).
- Shils, E. 1997, *The Virtue of Civility: Selected Essays on Liberalism, Tradition, and Civil Society*, Indianapolis, IN: Liberty Fund.